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환경계획

12차시

I. 국토-환경정책 연계

1.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¹⁾

1.1 국토정책의 연계

■ 경제적 효용성에 우선한 국토개발

- 국토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영토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국토를 개발, 이용하고 보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추진.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다. ‘국토보전’은 국토이용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 그 동안의 국토정책은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수요 증대를 위한 공급에 주력. 그 결과 수요의 특성이나 장기 동향 그리고 공급에 의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 특히 국토개발과 관련된 대형사업의 경우 지역개발 또는 경제부양을 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짐

1) 정책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보다는 정책의 한계를 가져온 배경이나 여건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두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정리하였다.

■ 사전 개발사업계획 추진과 사후 환경성 검토

- 과거 국토개발 및 이용을 위한 계획과 사업은 대개의 경우 공급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신도시, 산업입지, 댐 조성, 도로개설, 간척지 조성 등 모든 개발사업들은 개발의 필요성을 앞세워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을 밟아 옴. 개발에 의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빠른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추진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또 개발이 지연될 경우 토지가격 상승,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 됨

■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처리 기술에 대한 과신

-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현재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지금까지 국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는 사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과신이 지금까지 국토 및 환경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
-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왔던 그 동안의 국토개발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비용부담이나 목표달성을 앞당기려는 조급함에 간과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
- 이와 같이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경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과 과학과 기술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작용한 것. 지금의 국토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상당 부분이 과학과 기술에 의한 사후처리를 지나치게 믿어온 우리의 인식 때문

1.2 환경정책의 한계

■ 단기 현안중심 및 사후대응 방식의 정책 추진

-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나타난 문제를 부문별로 대응²⁾하여 왔다. 환경을 다루는 부문별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현안을 대처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미흡
- 이러한 접근 역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가치관과 연관. 부문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대응하는데 익숙하므로 다른 부문과 협조하기보다는 다른 부문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그 동안의 환경정책은 문제의 본질 규명보다는 외견상 나타난 문제에 치중하게 되고, 통합된 것이 아닌 분절된 형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초점
- 개발우선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개발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사후 대응방식의 환경정책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더욱이 기초정보의 부족과 환경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체제가 없었다는 점도 사후대책방식에 치중한 요인이 됨

2) 이러한 방식 역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이 패러다임에서는 환경문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분석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문제의 근원과 해답을 제시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이를 종합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전문분야에 대한 저마다의 우월성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타협과 협력은 자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에서 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 유관 분야와의 연관성 미흡

- 국토개발에 의한 환경문제는 개발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나타남. 환경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속성을 지님
- 그 동안의 환경정책은 단기간 내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위주로 추진
 - 대개의 환경정책은 목표 설정 과정과 당위성이 미흡하여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는가가 명쾌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제시된 환경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데에도 미흡. 단기효과에 치중한 환경정책이 추진된 것은 장기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행정, 즉 정책추진당사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빠른 기간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초조감도 한 몫을 하였을 것
 - 결과적으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실적을 내 세워야 하는 조직의 여건이 단기정책을 추진하도록 유인하는 동인(動因)이 됨
- 이러한 상황은 부처 간 관할업무를 지키려는 인식과 부처 간 협조체제 미흡에서 비롯, 이와 같은 업무간 경계를 지키려는 인식은 부처 간 유관분야에 대한 연관성 미흡뿐만 아니라 환경영역내의 부문 간에도 영향
 -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내용이나 전개과정을 보면 생물다양성, 산림환경, 자연자원관리, 수자원, 토양, 하천생태계 등 여러 부문과의 상호 연관성 고려가 인식

■ 지역 중심의 보전정책 추진

-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인간 편익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오염과 일부 보호종이나 보호지역을 관리하는데 중점. 국토의 전체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책의 추진에는 소홀
- 이것은 개발과 보전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즉, 그 동안의 환경정책이 보존가치가 있는 종(種)이나 대상을 개발로부터 격리시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환경보전 중심으로 추진됨
- 따라서 개발에 대한 환경문제를 등한시 해 온 것이 오늘날의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되도록 한 요인의 하나임. 그 결과 오늘날 국토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훼손과 경관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됨

2.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체계의 연계 필요성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은 두 계획이 연계해 본 경험 없이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두 계획이 연계되면 현재 계획체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가운데 해소되리라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짚어봄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 부재
- 계획의 단절로 인하여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반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 흔히 각종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상지의 생태적 흐름과 녹지축의 연결 등을 계획의 기본으로 한다고 함.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 계획내용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
 - 개발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지의 여건분석이 개발가능지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분석되는 이유도 바로 개발계획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연계의 필요성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궁극적으로 일정 공간의 토지를 점유하는 인간의 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 사실상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인간의 국토공간에 대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 국토계획은 국토환경을 개선·보전하기 위해 수립되는 환경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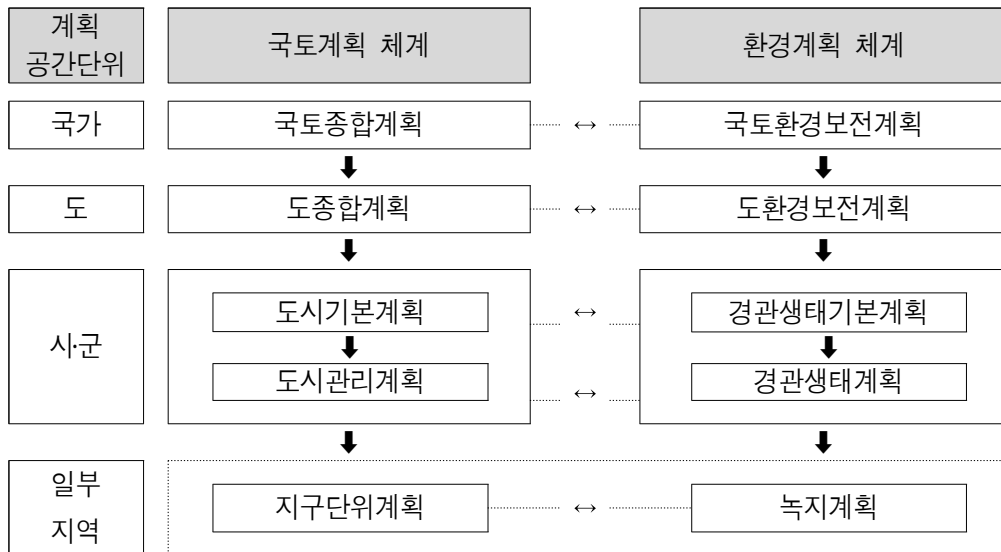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수립되고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획내용상 상충의 가능성이 많음. 두 계획간의 상충은 자연훼손, 경관부조화, 생태계 단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됨
- 대신 두 계획을 적절히 연계하면 국토개발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유도 가능함. 환경보전 역시 국토와 도시공간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자연과 경관의 질을 다룸으로써 우리 실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제도는 환경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비. 새로 개정된 환경 관련 제도에 따라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계획체계의 연계는 계획간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환경계획은 자연환경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밝혀주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할 때 구체적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
 - 국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즉시 지적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에 기초를 둔 환경계획과의 마찰지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함으로써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음

3.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체계의 연계

■ 계획위계별 연계

- 공간위계별 계획체계가 확립된 국토계획체계를 기준으로 환경계획체계를 맞추어 연계하는 것이 타당
 - 우선 국토단위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토환경보전계획, 도 단위에서는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시·군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경관생태계획, 그리고 지구단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녹지계획을 상호 연계
 - 녹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부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환경계획 전문가의 계획참여 및 협의를 보장

〈그림 0〉 국토계획체계와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 계획과정의 연계

- 계획체계의 연계는 조사, 평가, 계획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계되어야 할 계획내용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형식적 구호에 그칠 것. 조사단계에서 두 계획체계를 연계하려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 공유(公有)할 수 있는 통합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자연환경, 생활환경, 국토환경 등 부문별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초조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국토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조사계획을 수립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중복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3계층별로 공통되는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공유하도록 함. 조사결과를 공간화(도면화)하여 환경계획에 활용하고, 여러 분야 및 행정부처간에 또 중앙-지방정부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통의 정보가 수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계획주체의 연계

- 계획주체의 연계는 공간위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계획을 다른 주체들이 별도로 수립한 후 상호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과 애초부터 통합된 주체가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 국토환경보전계획은 각각 다른 주체가 별도로 수립하되, 두 계획주체들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 도 단위에서 행정조직과 정책운용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되, 두 계획 부서 간 계획내용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도시기본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되 부분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하위계획단계에서 절충점을 찾도록 유도

-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계획 역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생태계획을 도시관리계획보다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지구단위계획과 녹지계획은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함께 수립하고 별도의 녹지계획은 작성하지 않음

■ 계획시기의 연계

- 도환경보전계획과 경관생태기본계획은 도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보다 약간 앞서 수립하여 공간계획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비오톱지도 등 환경기초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략적인 기초정보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생태계획 단계가 실질적인 연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시기가 매우 중요. 문제는 이 단계의 연계는 기초정보의 구축과 두 계획의 상충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함.

■ 계획내용 협의여건 조성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와 내용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계획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계획내용을 서로 조금씩 수정·보완하여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협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계획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계획협의기구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심의위원회 등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실제 계획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형식이나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려는 자세가 중요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협업부처	환경부

가. 과제 개요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관리체계 개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등 정책실패 예방 시스템 추진
- ②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 등 선진국형 인·허가 체계 마련
 - 개발사업별 인·허가 일괄 통합운영방안 마련,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내실화
- ③ 기존 도심 및 지방 쇠퇴 도시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사회·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투자
- ④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확장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시범사업, 실내공간정보 및 3D 공간정보 활용, 공간-환경계획 체계 연계지원을 위한 국가환경지도 개발

II. 국토환경지도

■ 생태자연도³⁾

-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등급별 이용현황 (환경부, 전시포스터, 2009)



3) 국토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neins.go.kr/gis/mnu01/doc04a.asp> [2016.08.10.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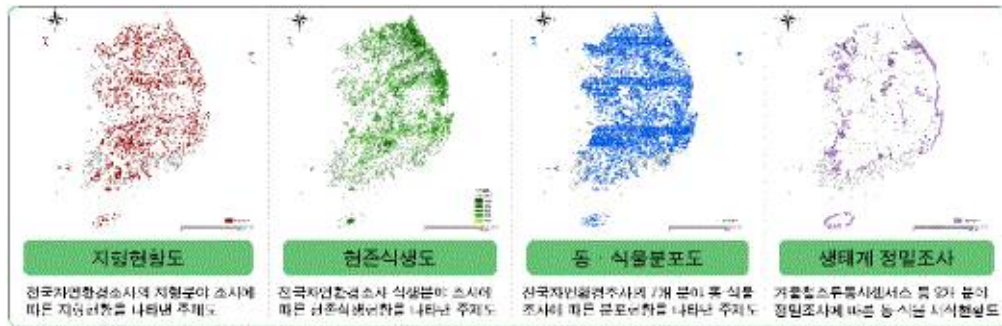
○ 활용분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공장을 짓기 전에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물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정책이라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 개발에 적용하기 힘들 뿐 만아니라,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를 이용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점 검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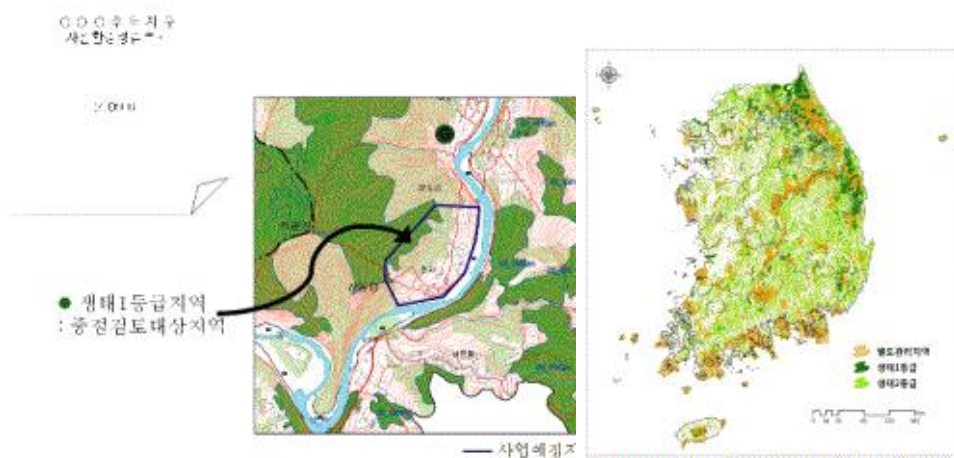
〈표 4〉 생태자연도의 등급구분 기준

구분	등급 기준
1등급 권역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권역	·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그림] 평가 자료의 종류 (환경부, 전시포스터, 2009)



[그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정책 시, 활용(환경부, 전시포스터, 2009)



■ 국토환경성평가지도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환경성)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여 전국을 5개 등급(환경적 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으로 나누고, 구분 색깔을 달리하여 지형도에 표시한 알기 쉽게 만든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 배경 및 목적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은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 전체 차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개발주체들은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사업 주체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4) 국토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neins.go.kr/gis/mnu01/doc01a.asp> [2016.08.10.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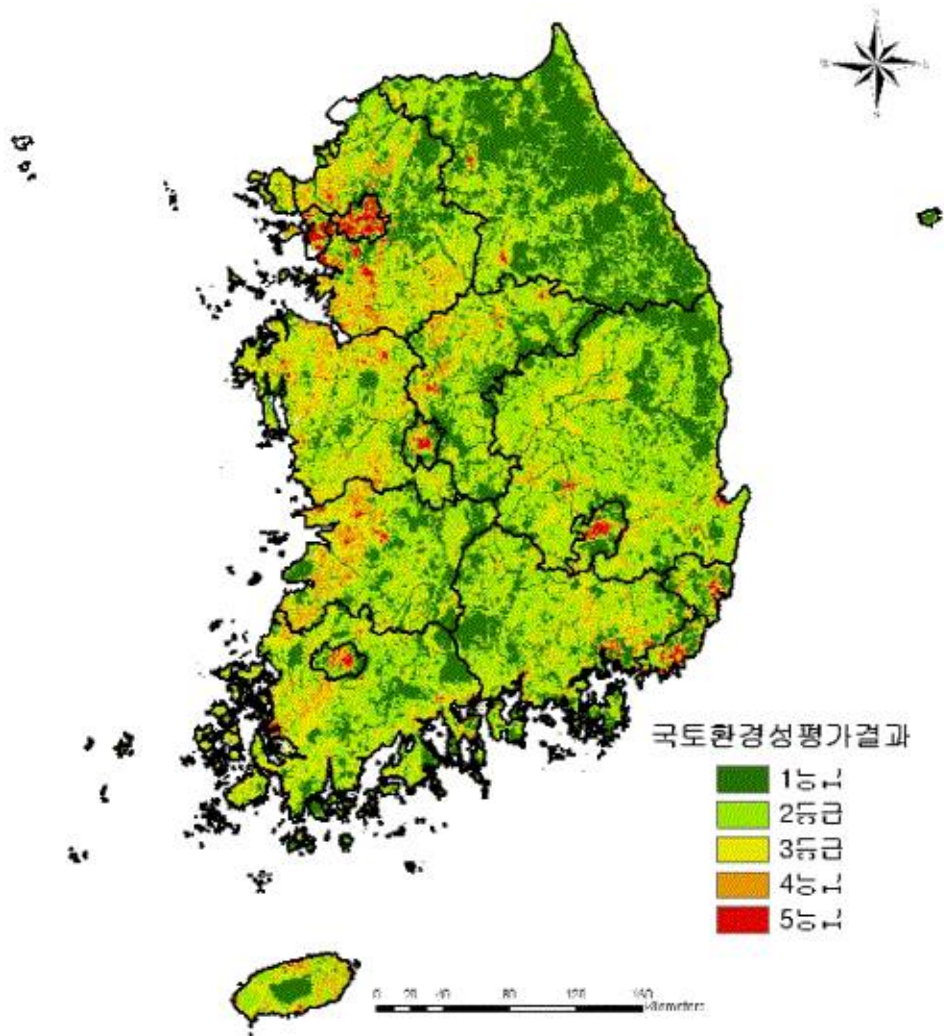
[그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배경(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보고서, 2009)



○국토환경성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국토환경성평가항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등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자연자산의 개념을 포함하는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함
 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 등 3개 부문 5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은 자연자원의 개념을 반영하여 자연성, 다양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잠재적 가치, 연계성 등 8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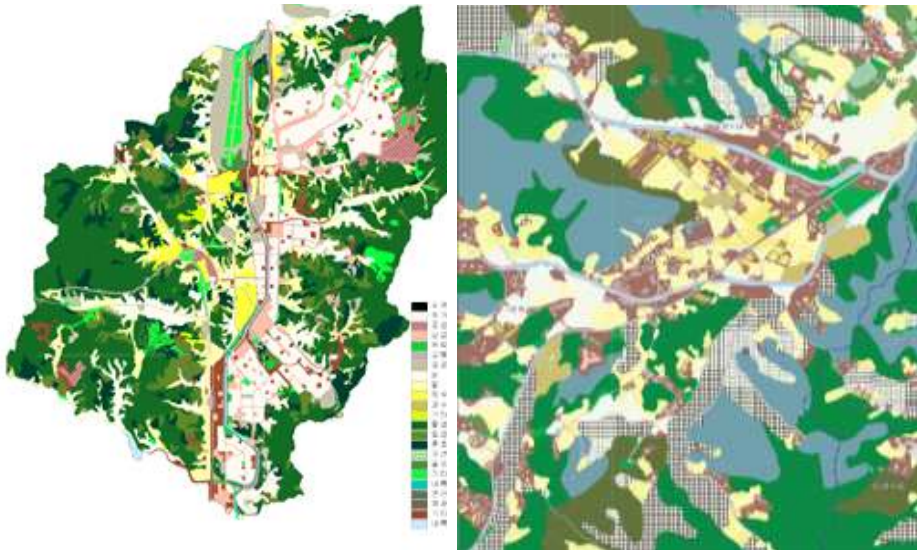
[그림] 최종 국토환경성평가 결과(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보고서, 2009)



■ 토지피복도⁵⁾

-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상태를 표현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토지피복분류도(Land Cover Map)라 한다.
- 토지피복분류(Land Cover Classification)는 원격탐사 자료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응용방법의 하나로서, 숲, 초지,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황을 분류한 것이다. 이 같은 토지피복지도는 지표면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여러 모델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수립의 효율성과 과학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분류항목
 - 항목에 따라 지표면의 상태를 7개 항목으로 나누는 대분류, 22개 항목으로 나누는 중분류, 41항목으로 나누는 세분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림 10〉 (그림 3) 성남시(좌), 용인시(우) 녹지피복지도



5) 국토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neins.go.kr/gis/mnu01/doc03a.asp> [2016.08.10.접속]

■ 비오톱지도6)

○비오톱 지도의 정의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비오톱지도"란 지역 내 공간을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여,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도시계획 부문 활용

- 도시기본계획 : 친환경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부문 및 공원녹지 계획에 1:5000 축척 이상의 비오톱지도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도시관리계획 : 기초조사 중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1:5000 축척 이상의 비오톱지도가 활용된다.
- 도시개발사업 : 인허가, 친환경적 도시개발 유도에 1:500 ~ 1:2000 축척의 비오톱지도와 비오톱 세부조사 결과가 활용된다.

〈그림 11〉 지방자치단체 비오톱지도 운영사례



서울시 비오톱유형 평가도



성남시 비오톱 구조 유형도

6) 국토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neins.go.kr/gis/mnu01/doc06a.asp> [2016.08.10.접속]